



한라산 1100고지에서 바라본 한겨울 정취 5일 한라산 1100고지 일대에 상고대가 핀 가운데 영실분화구를 배경으로 한 설경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신년 기획 '위기극복, 재도약 2021년' / <3> 제주4·3 완전해결 원년되려면

국가가 희생자에 정당한 보상을

생존희생자·유족 70~80대 고령... 배보상이 최대 과제
 국회 계류 개정안 1~2월 의결해야 내년부터 지급 가능
 도출된 당정 협의안 이견... 유족의견 최대한 반영 중요

한국 현대사 최대 아픔인 제주4·3. 제주4·3 희생자들과 도민들은 올해가 제주4·3 희생자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목하고 있다.

제주4·3은 올해로 73주년을 맞는다. 당시 4·3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은 이제 70~80대 고령이다. 더 이상 이들의 피해회복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핵심 조항이다.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제주4·3위원회가 불법군사재판 유죄 판결의 직권 재심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법무부에 의해 마련돼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4·3희생자 배보상은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2014년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했다.

배보상 문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과제로 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요예산 탓에 취임 4년차에 들어서도 올해까지도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18일 당정 협의안을 이끌어냈다. 개정안의 '보상' 조항을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로 수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당정 협의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6개월 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을 수립한다. 민주당은 최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 중이다. 보상 조항이 '위자료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로 수정되는 것을 두고, 보상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이 흐려지는 것을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상 의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에서 구체적 보상안을 마련하고 올 9월 국회에 제출될 2022년 정부예산안에 위자료 예산이 반영되면, 비로소 제주4·3은 완전한 해결에 다다르게 된다.

하지만 그 대답들이 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 난항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지지 못하고 있어 유족들의 애타고 있다.

여야 모두 국가가 4·3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고려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지역 코로나19 첫 중환자 발생

입원중인 60대...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 102명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현장점검 결과 237건 적발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환자가 발생했다. 더욱이 확진자 관련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 제주 이어지는 'n차 감염' =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4명(제주 457~460)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460명으로 집계됐다.

458번 확진자는 31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길 직업재활센터 관련 확진자이다. 457번 확진자와 459번, 460번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하루 도내에서는 8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확진자 8명은 ▶441번 확진자의 접촉자 3명(451·452·453번) ▶443번 확진자의 접촉자 3명(449·450·454번)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1명(456번) ▶감염경로 확인중 1명(455번) 등으로 8명 중 7명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됨에 따라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 중환자 발생 =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처음으로 발생한 중환자는 60대로, 해당 환자는 평소 고혈압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2월 초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도내 460명의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총 102명(22.2%)으로 이

중 입원 중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방역수칙 위반 '수두룩' =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237건 중 228건은 1차 시정명령, 9건은 유흥시설 5종 등 집합금지 위반 집합금지 6건,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用に 따른 과태료 1건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총 701건 현장 점검 실적 중 144건 현장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점 관리시설 12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6개 업종의 경우 총 93건의 적발 건수 중 84건 현장 시정명령이, 9건의 단속 처분이 이뤄졌다.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는 고발 조치 진행 중이다. 이태원기자 ity9456@ihalla.com

정부, 오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은 100만~300만원
 고용취약계층 50만~100만원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조 3000억원 규모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 감면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6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된 감면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재난(코로나19 장기화)으로 인해

임세는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날 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4조 8000억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출안을 통해 총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한·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는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청와대·부미현기자

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와함께 제주테크노파크도 입주기업 75개 기업에 대한 임대료 30% 인하를 6개월 연장했다. 이태원기자 ity9456@ihalla.com

축 임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상무 제32대 제주농협 지역본부장 제5대 제주농협 영입본부장

변 대 군

강 승 표

문 상 철

승진 및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농업·농촌 발전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조합장 일동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	조천농협조합장 김진문	함덕농협조합장 현승종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	한경농협조합장 김군진	고산농협조합장 고영찬
김녕농협조합장 오충규	구좌농협조합장 윤민	애월농협조합장 김병수	하귀농협조합장 강병진	대정농협조합장 이창철	안덕농협조합장 유봉성
중문농협조합장 김성범	서귀포농협조합장 현영택	효돈농협조합장 백성익	위미농협조합장 김영근	남원농협조합장 김문일	표선농협조합장 고철민
성산일출봉농협조합장 강석보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	제주축협조합장 강승호	서귀포시축협조합장 김용관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	